

# 전남 의대 설립, 숨을 고르고 함께 나아갈 때

기고

김상모

전국 이통장연합회  
전남지부장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호흡이다. 호흡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뿜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숨을 들이쉬고 내뿜기 전 잠시 숨을 멈추는 순간이 있다. 우리는 대부분 중요한 그 순간을 간과하는데, 관련된 흥미로운 연구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출신 애리조나의 과대학 앤드류 웨일 박사가 대중화 시킨 '4-7-8 호흡법'이다. 4초간 숨을마시고 7초간 숨을 참았다가 8초 동안 숨을 내뿜는 방법이다. 이 호흡법은 폐에 많은 산소를 공급해 스트레스를 대폭 줄여주고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준다.

여기에서 숨을 참는 '멈춤'의 순간이 중요하다. 멈춤은 단순히 정지된 시간이 아니다. 깊이 들이마신 숨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는 최대한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이산화탄소는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기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호흡의 '숨 고르기' 과정이 필요하다.

전남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얼마나 설움을 겪어야만 했는가. 심지어 우리보다 인구가 적은 전북, 충북, 강원도에도 여러 개 있는 의과대

학이 전남에만 없다. 이로인해 골든타임 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해, 해마다 300여 명의 도민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고 있다. 우리 도민들은 의대가 없어 다른 지역민들이 보장받고 있는 헌법상 권리인 '생명권' 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30년 넘게 전남도와 시군, 대학, 정치권 등 도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정부에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지난 겨울, 때서운 한파 속에서 국회의사당 앞에 모인 500여 명의 전남도민과 향우들이 의대 신설을 울부짖은 것도 그 뜨거운 열망과 염원을 보여주는 한 예였다.

이제 전남도는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3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전남도에서 대학을 정해서 의견을 수렴해 알려주면 추진하겠다"고 30년 만에 확답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정부 요청에 따라 의대를 신설할 대학을 추천하기 위한 전남도 공모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중앙부처에 공모를 맡기면 좋겠지만, 지난 30년 동안의 상황을 봤을 때 성사되기 어렵다는 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알 일이다. 만에 하나 정부가 대학을 선정한다 하더라도 의대가 설립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혜택도 기대하기 어려워 지역민의 상실감은 더욱 클 것이다.

솔직히 지금 공모 방식 외에 다른 대안이 있는가? 특정 지역의 주장대로 전남도가 대학을 선정해 추천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요청을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도 전남도가 공모 방식으로 한 대학을 선정해 정부에 추천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간의 의대 유치를 위한 노력과 준비가 숨을 깊이 들이마시기 위한 시간이었다면, 지금은 전남도 공모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과 갈등을 멈추고 숨을 고르는 '멈춤'의 시기가 필요하다. 이제 도민과 정치권, 대학, 전문가들이 함께 뜻을 모아 정부에 힘차게 결과물을 내놓을 차례다.

전남도 국립 의대 설립은 지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3차 병원이 없어 죽어가던 전남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을 '산소 호흡기'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전체 도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자 지역 의료체계를 완성하는 중요한 사령탑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잠시 '4-7-8호흡법'을 해보자. 깊이 숨을 들이마서 '호흡 멈춤'의 순간을 느껴보자. 이완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앞으로 영원히 기회가 없을 지도 모르는데, 진정으로 전남도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일까? 특정 지역의 주장처럼 전남도 공모에 응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30여년간 받아들여지지 않은 방식으로 실현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최선의 답은 하나뿐이다. 양 대학과 양 지역이 공론의 장에 나와 전체 도민과 후손을 위한 튼튼한 '산소 호흡기'를 만들기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때다.

## 社說

### 초당적 협력 필요한 전남 '특자도 특별법'

#### 행안위 거쳐 이달 중 국회 상정

지난 달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이 7월께 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소멸시대를 맞아 지역특성을 반영한 규제 완화와 맞춤형 지원책을 펼치도록 명시하고 정부 권한을 지방에 과감히 이양해 주도록 요구하는 것은 전남도의 교육책이다. 여·야가 협력해 전남특별자치도의 설립근거가 될 특별법이 7월 국회를 통과해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기대한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달 1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 전원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고, 전북·대전·경기·비례대표 7명도 힘을 더했다. 이 법안은 상임위 전체 회의를 거쳐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 뒤 상임위 심사와 관련 10개 정부부처 의견 취합 등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정

부 이송 후 정식 공포된다. 이번 특별법의 골자는 규제완화와 권한이양이다. 특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정책과 인구감소지역 학생교육수당 지급, 첨단 농식품 수출전 문단지 조성, 신재생 집적화단지,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정부출연기관 지역조직 설립,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특례는 기존 특자도와 차별화된 조항들이다. 급속한 인구감소로 지역의 경제·사회적 기반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지역민 스스로가 지역소멸의 대안을 찾겠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전남은 지방 소멸에 직면한 최대의 위기지역이다. 지역 인프라 부족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해법은 분명하다.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정치권은 여·야를 떠나 이번 특별법을 통해 전남이 회생의 단초를 찾을 수 있도록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지역에서 만든 맞춤형 정책이다.

### 캐스퍼 전기차 질주에 상생일자리 달려있다

#### 사전계약... 15일 본격 양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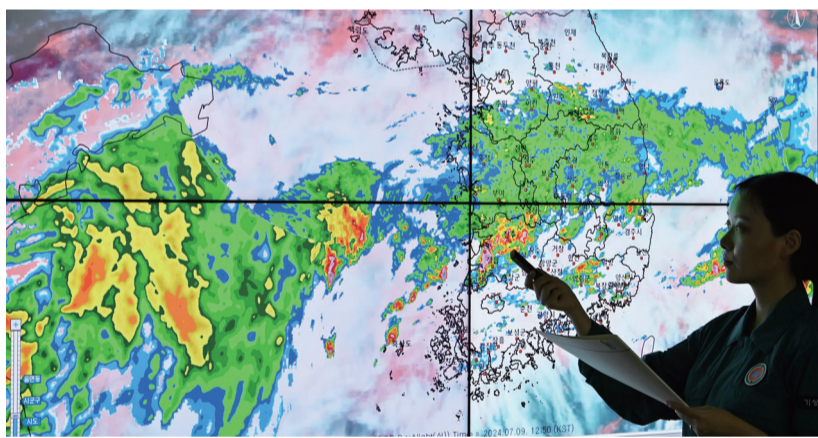
광주글로벌모터스(GGM)에서 생산되는 '캐스퍼일렉트릭'이 사전계약을 시작했다. 현대차는 뛰어난 상품성과 합리적인 가격을 갖춘 '캐스퍼일렉트릭'의 인스퍼레이션 모델에 대한 사전계약을 9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GGM도 15일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픽셀 그래픽을 적용한 다부진 디자인, 여유로운 도심주행이 가능한 315km의 1회 충전주행가능거리, 차급을 뛰어넘는 다양한 편의·안전 사양으로 차별화된 상품성을 갖추고 있다. 판매 가격은 전기차 세제혜택 적용 전 기준 3150만원이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고시 등재 완료 후 세제혜택을 적용하면 판매가격이 2990만 원부터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GGM은 오는 15일 양산되는 캐스퍼 EV 생산을 당초 계획보다 25% 정도 늘리기로 했다. 이로써 1만 7000대를 생산할 예정이었던 전기차는 당초 계획보다 4000여 대(25%) 늘어난 최소 2만 1000대 이상

을 생산한다. 전기차 생산이 크게 늘면서 GGM의 올해 총 목표 생산 대수도 4만 8500대에서 5만 3000대로 증가할 예정이다.

캐스퍼 판매량은 노사민정 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결과물로 탄생한 GGM의 생존과도 직결돼 있다. 하지만 GGM에서 생산한 캐스퍼의 광주지역 판매량이 저조했다. 2021년 9월부터 지난 달까지 캐스퍼 국내 누적 판매대수는 총 11만 7985대다. 이 가운데 광주지역에 등록된 차량은 1.8%인 2117대에 불과하다. 전국 17개 시·도 중 15번째다. 노동조합 설립도 변수다. 최근 'GGM노동조합'에 이어 '광주글로벌모터스노동조합'이 잇따라 출범했다.

노조가 출범하면서 앞서 노사민정 협약서를 통해 '누적 35만대 달성' 때까지는 상생협의회를 중심으로 임·단협 협상 등을 진행키로 한 사회적 합의가 깨졌다. 향후 GGM은 노사 갈등과 지역민의 무관심으로 대한민국 상생일자리 1호의 '공든 탑'이 무너질까 우려된다. 출시를 앞둔 캐스퍼 전기차의 성공은 결국 노사 상생과 지역민의 관심이 중요해 보인다.



#### 사진으로 보는 세상

장맛비가 내린 9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도권기상청에서 예보관이 비구름의 이동 경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저기압과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중심으로 최대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뉴스스

#### 서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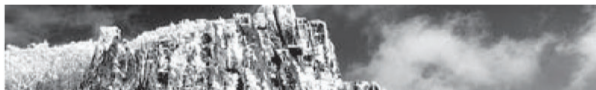
"민주주의는 유대인의 음모다. 아리아인처럼 위대한 민족에게 평등 같은 것은 필요 없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민주주의나 평등 같은 쓸데없는 사상을 퍼뜨려 아리아인을 쇠퇴시키려 한다." 아돌프 히틀러의 자서전인 '나의 투쟁'의 일부다.

히틀러는 1923년 뮌헨 폭동 실패 뒤 교도소에서 '나의 투쟁'을 출간했다. 책은 히틀러가 반유대주의자가 된 과정을 묘사하며 그의 정치 사상 및 미래 독일을 위한 계획의 윤곽을 보여 준다. 히틀러는 '나의 투쟁'을 통해 철저한 반유대주의와 극단적 민족주의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히틀러는 극우주의를 대표한다.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 후 큰 국난에 처한 자국의 경제를 일으키겠다고 대중을 동원한 대표적인 선동가였지만 그의 혁명은 실패로 끝났다. 극우주의는 역사적으로 히틀러가 보여준 반유대주의 뿐 아니라 보호무역주의, 이슬람 혐오, 반이민 정서 등이 속한다.

최근 극우주의가 유럽을 강타했다. 각종 선거에서 극우정당의 선전이 눈에 띈다. 히틀러식 폭력과 인종청소 같은 과격한 극단적 성향은 아니지만 애국주의나 권위주의, 인종주의 등은 극우의 속성 그대로다.

유럽은 '반(反)이민' 정서가 극에 달하면서 유럽 우파



정당의 영향력이 커졌다. 지난 2022년 이탈리아를 시작으로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프랑스 등에서 극우정당의 약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100년 만에 극우 총리가 탄생했고, 13년간 좌파 정권이 집권한 네덜란드에서도 지난해 총선에서 극우 성향 자유당이 제1당이 등극했다.

그나마 영국과 프랑스에서 좌파의 승리로 극우 바람이 견제되는 분위기다. 영국에서 보수당 집권 세력에 대한 심판론으로 14년만의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이어 프랑스 총선 결선에서

도 예상을 뒤엎고 좌파 연합이 1위를 차지했다. 유럽을 강타한 극우열풍은 지난 2018년을 능가한다는 평가다. 최근 극우정당의 세력화가 이뤄지면서다. 유럽 주요 극우·포퓰리즘 정당이 참여하는 유럽의회 내 교섭단체 '정체성과 민주주의'(ID)에 소속된 12개국 정당 대표는 지난해 말 이탈리아 피렌체에 모여 EU의 관료주의, 이민자 정책 등을 앞세워 EU 지도부에 날을 세우며 네트워크 강화에 나서고 있다. 고물가, 난민 유입에 따른 혼란, 친환경 정책으로 인한 비용 상승 등에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참혹했던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이탈리아와 흡사한 면이 없지 않다. 유럽을 강타한 극심한 경제난과 사회적 혼란이 '신(新) 극우시대'를 불러오는 듯하다. 김성수 논설위원

全南日報	사창·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www.jnilbo.com m.jnilbo.com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